

독도에 대한 종합 브리핑

핵심 요약

본 문서는 독도의 지리적 특성, 역사적 영유권 근거, 그리고 현대 한일 갈등의 양상과 평화적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 생활권에 속하며, 지질학적으로도 울릉도와 동일한 기원을 공유한다. 또한, 풍부한 어족 자원과 막대한 양의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보유하여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한반도, 일본, 러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다.

역사적으로 『세종실록지리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등 한국의 수많은 고문헌과 고지도는 독도를 명백한 우리 영토로 기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일본의 고문서인 『은주시청합기』(1667)와 최고 행정기관의 공식 문서인 「태정관 지령」(1877)조차 독도를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근거로 하지만, 이는 러일전쟁 중 주인이 없는 땅을 선점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편입 시도였다.

현대의 한일 갈등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과정에서 일본의 로비로 독도 귀속이 명시되지 않으면서 시작되었다. 갈등은 1998년 신한일 어업협정으로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되고,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어민들의 불만을 배경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며 재점화되었다. 이후 일본은 교과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교육을 초·중학교까지 확대하고 있다.

갈등 해결을 위해 한국은 '실효적 지배' 강화를,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성공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을 넘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또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학술 공동 연구, 민간 교류, 특히 양국 청소년 간의 역사 대화와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라는 더 큰 틀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제1부: 독도의 지리적 및 생태적 가치

위치와 구성

- 위성 좌표: 동도 우산봉 기준 북위 $37^{\circ} 14' 26.8''$, 동경 $131^{\circ} 52' 10.4''$ 에 위치한다.
- 지리적 인접성: 울릉도에서는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하여 역사적으로 울릉도 주민의 생활권에 포함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일본의 오키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 구성: 동도와 서도라는 두 개의 주요 섬과 89개의 부속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 면적: 전체 면적은 $187,554\text{m}^2$ 로, 동도($73,297\text{m}^2$)와 서도($88,740\text{m}^2$)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서울종합운동장(잠실)의 약 2배 크기에 해당한다.

행정 주소

독도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하며, 동도와 서도에 각각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어 있다.

- **동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이사부길 (독도 경비대, 독도 등대 소재)
- **서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안용복길 (주민 숙소, 물골 소재)

자연 환경 및 지질학적 특성

- **생성:** 약 460만 년 전에서 250만 년 전 사이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이다. 이는 울릉도(250만 년 전)보다 앞서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
- **지질학적 연관성:** 독도와 울릉도는 해저에서 연결된 해산 형태이며, 조면암이라는 동일한 암석으로 구성되어 지질학적으로 강한 연관성을 가진다. 반면, 일본 오키섬은 화산 활동과 무관한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질학적으로 독도와 관련이 없다.
- **기후:**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연평균 기온은 12°C이며, 안개가 자주 끼고 연중 약 절반이 비 또는 눈이 내린다. 맑은 날은 연간 약 60일에 불과하다.

경제적 및 전략적 가치

독도는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가치를 지닌다.

- **자원의 보고:**
 - 어족 자원: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황금어장으로,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
 - 에너지 자원: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메탄 수화물)가 독도 부근에 약 6억 톤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약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 **지정학적 가치:**
 - 한반도, 일본, 러시아의 중간에 위치하여 해상 운송의 중요 통로이자 중요한 방위 거점이다.
 - 선박의 긴급 대피, 구조 기지, 항공기 유도 기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경제적 가치:**
 - 수산업: 동해안의 주요 어업 거점이다.
 - 관광업: 2008년 기준, 연간 약 13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약 520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
- **학술적 가치:** 해양 기후 및 어장 예보, 지질학 연구의 최적지로 해양과학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2부: 역사적 사료를 통해 본 독도 영유권

다양한 역사적 명칭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일본, 서양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 **한국:** 우산도(于山島), 가지도(可支島, 강치가 많이 사는 섬), 석도(石島, 돌섬), 독도(獨島, 돌섬의 다른 표기).

- 일본: 마쓰시마(松島, 송도), 다케시마(竹島, 죽도 - 1905년 편입 시 공식 명명).
- 서양: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발견), 호넷 암초(Hornet Rocks, 1855년 영국 군함 발견).

한국의 고문헌 및 고지도 기록

- 『세종실록지리지』(1454):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여, 두 섬의 존재와 상호 가시성을 명시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팔도총도 지도에 우산도와 울릉도를 함께 그려, 두 섬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 『만기요람』(1808):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다"라고 기록하여 우산도가 일본이 부르던 송도(松島, 당시 독도를 지칭)임을 밝혔다.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 할 것"이라고 공포하여, 석도(石島, 독도)를 울릉군의 공식 관할 구역으로 선포했다.
- 정상기의 『동국지도』(18세기 중반): 울릉도 오른쪽에 우산도(독도)를 정확하게 표기하여, 조선 후기 독도의 위치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졌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고문헌 및 고지도 기록

일본의 역사 자료 중 다수는 오히려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다.

- 『은주시청합기』(1667): 오키섬 관리가 작성한 보고서로, "오키섬 서북쪽에 마쓰시마(松島, 독도)와 다케시마(竹島, 울릉도)가 있는데... 본주의 서쪽 끝은 오키섬을 경계로 한다"고 서술하여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의 경계 밖으로 규정했다.
-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1870): 메이지 정부 외무성 관료들이 작성한 보고서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에 속하게 된 사정"을 언급하며 두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다.
- 「태정관 지령」(1877):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내린 지령으로, "품의한 취지의 죽도(울릉도) 외 1도(독도)의 건에 대해서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명시하여, 독도가 일본과 무관함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접양지도』(1785):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동일한 황색으로 칠하고 '조선의 것'이라고 명기했다.

반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되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는 어업인 나카이 요자부로의 청원을 받아 일본 내각이 독도 편입을 결정하고, 2월 22일 시마네현이 이를 고시한 사건이다.

안용복의 활동과 그 영향

조선 숙종 때의 어부 안용복은 두 차례(1693, 1696)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하며 일본 어민들의 월경 조업에 항의했다. 그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 일본의 도해 금지령: 안용복 사건 이후,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1696년 1월, 일본인의 울릉도 방면 출어를 금지하는 '도해 금지령'을 내려, 사실상 두 섬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했다.
 - 조선의 수토관 제도: 조선 정부는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1697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울릉도와 주변 섬을 관리하는 수토관을 파견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영토 관리를 강화했다.
-

제3부: 현대의 갈등과 평화적 해결 모색

갈등의 기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초기 연합국 문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군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1946)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초기 초안(1947)들은 독도(리앙쿠르 암초)를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일본이 반환해야 할 한국 영토로 명시했다.
- 최종 조약문의 모호성: 조약 체결 과정에서 일본의 로비 활동으로 최종 조약문(1951)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명문 규정이 삭제되었다. 일본은 이 모호성을 빌미로 영유권 주장을 시작했다.
- 이승만 라인 선포: 이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1월, 해양 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독도를 포함하는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선포하고, 이를 침범하는 일본 어선을 단속하며 실효적 지배를 강화했다.

갈등의 재점화: 신한일 어업협정과 다케시마의 날

- 신한일 어업협정 (**1998**): 1994년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 필요성으로 새로운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독도가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한국 내에서 영유권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 어민들의 불만과 '다케시마의 날': 일본 측에서는 협정 이후 어획량이 급감했다는 시마네현 어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시마네현의 경우 2004년 어획량이 협정 이전의 1/4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제적 불만을 배경으로 시마네현 의회는 2005년 3월 16일, 1905년 고시일을 기념하여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역사적 영유권 주장보다는 어업권 확보와 관련된 경제적 동기가 더 강하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 강화: 교과서 왜곡

- 왜곡의 시작: 신한일 어업협정 이후인 2001년부터 일본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 정부의 공식 지침: 2008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공식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가르칠 것을 주문했다.
- 왜곡의 심화:
 - 중학교: 2011년판 중학교 교과서 18종 중 14종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서술했으며, 이 중 4종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 초등학교: 2015년판 초등학교 교과서 4종 모두 '일본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기술을 포함했다. 특히 한 교과서는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 등 긍정적 한일 관계 서술을 삭제하고 독도 관련 갈등 내용을 삽입했다.

갈등 해결을 위한 제언

양국 정부와 국민은 독도 문제에 대해 상이한 접근법과 인식을 가지고 있다.

|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2010년 KBS-NHK 공동 여론조사) ||
--- | :--- || 한국 | 일본 || 1.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 (62%) | 1. 정치적 대화 (37%) || 2.
역사인식 문제 해소 (34%) | 2. 경제 교류 (28%) || 3. 전후 보상 문제 해결 (26%) | 3. 문화와
스포츠 교류 (28%) |

이러한 인식 차이를 극복하고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정확한 역사적 사실 기반 접근: '우리 땅'이라는 감정적 애국주의를 넘어, 역사적 사료에 근거한 정확한 지식과 논리로 독도 영유권의 정당성을 이해하고 주장해야 한다.
2. 학술적·민간 교류 활성화:
 - 공동 연구: '한일 역사 공동 연구 위원회'와 같이 양국 학자들이 함께 역사를 논의하고 공통의 이해를 모색하는 학술적 접근을 지속해야 한다.
 - 민간 교류: 2013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국 국민 대다수가 현재 한일 관계가 나쁘다고 인식하면서도(한국 67.4%, 일본 55.1%), 미래를 위해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한국 73.6%, 일본 74.0%).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3. 미래 세대의 인식 전환과 교류:
 - 양국 학생들이 직접 만나 역사 갈등에 대해 토론하고 공통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상대방을 설득의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해결적 관점으로 전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